

ISSN 2384-3624

# JNKS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10, No. 1  
2024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JN  
KS

2024  
Vol. 10  
No. 1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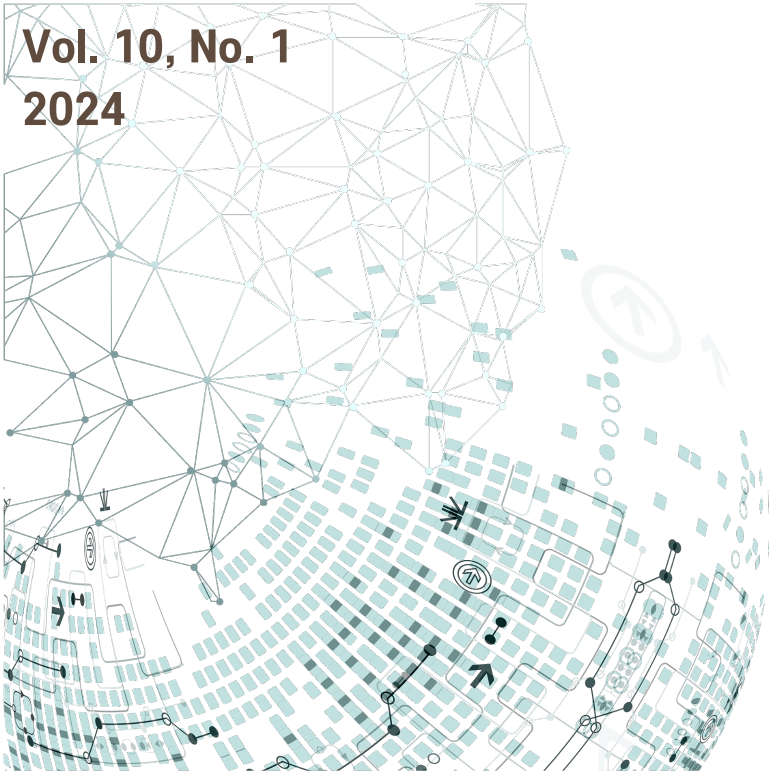
# JNKS

---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

Vol. 10, No. 1  
2024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ISSN 2384-3624



9 772384 362005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홍석훈 (창원대학교)

## 편집위원

Balazs Szalontai (고려대학교) 임예준 (고려대학교)  
이기완 (창원대학교) 나용우 (통일연구원)  
여현철 (국민대학교) 박성용 (전북대학교)  
최용섭 (선문대학교) 황수환 (통일연구원)  
김에스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편집간사

정원희 (고려대학교) 배상경 (고려대학교)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10, No. 1

인쇄·발행일 2024년 6월 30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발행인 임재천  
편집인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편집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323호  
전화 : (044)860-1927, E-mail : jnks.korea@gmail.com  
홈페이지 : ppri.korea.ac.kr

인쇄처 제일문화사

ISSN 2384-3624

# Contents

- ✔ **북한의 권력세습과 재연된 후계자 논쟁**  
North Korea's Succession of Power and Renewed Successor Debate  
백승국, 김동욱 / 7
- ✔ **Between Nation and the State: The Formation of the Populistic Vertical Antagonism in South Korea by Colonial Legacies and Anti-Communism**  
Hyeonjun Kim / 33



**JNK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10, No. 1 (2024)

## 북한의 권력세습과 재연된 후계자 논쟁

백승국

제1저자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unibsk94@gmail.com

김동욱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tongooki@naver.com

## 초록

북한은 혈통에 의한 3대 세습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있었다. 당시 학계에서 김정남과 김정철이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었고,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이 김정일의 뒤를 이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2022년 11월, 김정은이 딸을 공개함으로써 후계자 논쟁이 재연되었다. 재연된 후계자 논쟁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김주애를 둘러싼 연구자들의 논쟁은 제한된 정보와 자료의 부족으로 전개되어 소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김주애의 등장이 남북한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고, 4대 세습과 북한의 미래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은 4대 세습을 단행할 것이며, 우리는 미래에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는 김정은의 후계자가 핵무기를 물려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또한, 연구과제로 김주애의 등장을 목격한 이후 탈북한 북한이 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4대 세습과 김주애의 등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 누구나 동의할 정도의 정보와 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계자 논쟁은 무의미하다. 현재로서는 특정 인물이 아닌, 4대 세습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김정일, 김정은, 김주애, 후계자, 4대 세습

## I. 들어가며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활성화된 국내의 북한연구는 질적·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북한연구의 발전은 곧 다양한 관점에서 북한 체제와 현황을 진단하고, 학문적인 쟁점에 따른 토론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특히, 베일에 싸인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로열패밀리, 후계자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는 물론이고 언론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후계자 문제는 가장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극비이며, 권력층에서도 비밀스럽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북한 후계자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후계체제, 그리고 권력승계는 북한정치 연구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다.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안정적인 권력승계’이지만, 권력승계 이전에는 후계자를 둘러싼 논쟁이 큰 이슈였다. 예컨대, 과거 박정희 정부는 김일성의 후계자를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예측하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할 당시 김영주가 직접 직인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8년 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였다(자유아시아방송, 2021/12/17). 또한,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김정남 혹은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이 언론 및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었다. 이 당시까지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2022년 11월 19일, 북한의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sup>1)</sup> 이후 아버지 김정은과 여러 차례 정치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김주애가 후계자인가?’라는 논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시 북한의 후계자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었다. 그래서 본 글은 과거의 후계자 논쟁을 회고하고, 재연된 후계자 논쟁이 갖는 한계를 고찰하면서 4대 세습 공식화에 대한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시도에 대한 배경은 한 연구자가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변수에 둘러싸인 한반도에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으로, “현재만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앞으로 나타날 변화의 요건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교훈과 반성 때문이다(김동엽, 2023/12/18).

1) 아직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정은 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가기관과 학계에서는 김주애라는 이름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도 김정은의 딸을 김주애로 호명하도록 한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현재 김주애를 둘러싼 국내 연구자들의 논쟁은 소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의 4대 세습에 대한 전망과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소모적인 논쟁이 갖는 한계임을 뜻한다. 따라서 본 글은 재연된 후계자 논쟁을 발전적인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다.

## II.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체제

북한은 혈통에 의해 권력이 세습되는 독재국가이다. 1946년부터 2008년까지 303명의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가 몰락하였는데, 이 중에서 205명의 독재자는 엘리트가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 권력에서 축출되었다(Svolik 2021, 4-5). 그리고 과거 소련과 중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승계 시기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노출된다(오경섭 2009; Rush 1978).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은 대기근을 겪었고, 이에 따라 북한붕괴론이 등장했으나 김정일은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였다. 이후 삼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후계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김정은 집권하에서 4대 세습의 후계자가 김주애인지에 대한 논쟁이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혈통에 의한 권력세습이 가능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엘리트 집단의 지지와 후원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심 엘리트 집단의 기원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동료들과 부하들이며, 이들의 자녀들은 대를 이어서 특권을 누리며 북한의 지도자와 함께 정권을 재창출하고 있다. 즉, 북한 지도자와 엘리트 집단은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북한 지도자와 엘리트 집단의 관계는 ‘운명공동체’로 볼 수 있다(Jung and Joo 2021, 8-9). 이 운명공동체는 북한의 내구성과 권력세습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으로 보인다.

정권 수립 초기부터 북한은 혈통에 의한 권력세습이 가능했던 정치적 구조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당시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차지했던 권위는 오늘날과 다르다. 초기 북한의 권력 구도는 김일성의 빨치산파 외에도 소련파, 남로당파, 연안파, 갑산파 등 다양한 정치파벌들이 권력이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였다. 집단지도체제는 정치적 파벌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956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축출하고자 연안파를 중심으로 반김일성 세력이 규합하였는데, 실패로 끝났다. 이 사건이 바로 8월 종파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일성은 반종파 투쟁을 통해 반대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하여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만들면서 일인독재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유호열 2004, 39-54). 이어서 1967년 이효순과 박금철 등 갑산파 세력을 숙청하면서 김일성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일성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세력마저 북한정치에서 모두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권력을 독점한 김일성에게 있어서 다음 정치적 과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승의 문제였다. 1950년대 스탈린(Joseph Stalin) 사후 등장한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 지도부의 스탈린 격하운동은 적어도 김일성 스스로가 자신이 권력에서 물러난 이후 권위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Lim 2012, 555). 이러한 고민을 하는 독재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자신이 가장 믿는 인물이면서 자신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인물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이다(Levitsky and Way 2010, 64). 특히, 권력세습은 정치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독재국가에서 주로 발생한다(Brownlee 2007, 600).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자면 김일성은 장남 김정일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갑산파 숙청 이후 북한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갑산파 숙청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 가계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화되었다. 우선, 기존의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로 개편하여 모든 지역과 기관들에 설치하고, 선전일군들을 배치시켜 김일성의 위대성에 관한 정치사상교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정영철 2005, 173).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상징하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박물관 등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문학예술 작품들도 연달아 제작되었다(정영철 2005, 175). 그리고 1962년부터 임시공휴일이던 김일성의 생일은 1968년부터 국경일이 되었다(Lim and Yoo 2010, 343). 이와 함께 김일성의 생모인 강반석의 우상화도 함께 전개되면서 강반석은 ‘조선의 어머니’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북한 여성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의 대상이 되었다(정영철 2005, 180). 1974년 10월에는 량강도 신파군(현 김정숙군)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동상을 세우고 혁명역사관을 건립하면서 김정숙을 ‘항일의 여성영웅’이자 ‘혁명의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했다(Lim and Yoo 2010, 344). 이 같은 현상의 결과로 오직 김일성의 ‘만경대 가문’만이 조선의 혁명(해방)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가문이며,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정치적 권위와 사회적 관념이 형성되었다(Lim and Yoo 2010, 351).

이를 주도한 것은 김정일이었다. 즉, 김정일은 스스로 후계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선전선동 분야에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도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6차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집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어 벌써 해방후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할 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영예로운 임무”가 다음 세대에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계속혁명을 위한 후계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일성 1984, 203).

핵심 엘리트들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적극적인 조력자였다. 훗날 김일성이 1972년 환갑을 보내고 며칠 뒤 빨치산 원로모임에서 후계자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선배였던 최현은 김정일을 강하게 지지하였다(손광주 2003, 82-83). 1974년 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대내적으로 후계체제를 공식화했다. 당시 혁명 1세대인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동료들과 부대원들은 “김정일 동지를 수령의 후계자로 모신 것은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대통운”이라며 김정일 후계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손광주 2003, 108). 권력세습에 있어서 북한의 핵심 엘리트 집단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이는 독재자에 대한 ‘편승’으로 볼 수 있다.

혈통에 의한 권력세습을 제도화한 규범은 1974년 발표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이다. 이 10대 원칙은 김영주가 작성한 것을 김정일이 수정·보완하여 발표한 것이다. 10대 원칙은 김일성 숭배를 제도화한 것으로, 현재에도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사소한 행동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당 규약과 헌법보다 강한 권위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지배하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도구이기도 하다. 특히 10대 원칙 제10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야 한다면서 후계체제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결국 북한의 10대 원칙은 최고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일인독재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혈통승계에 기초한 후계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오경섭, 2009, 288). 이처럼 북한의 권력세습은 규범적 차원에서 정당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후계자는 적어도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기관의 핵심 직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III. 후계자 논쟁의 어제와 오늘

#### 1. 과거의 후계자 논쟁: 누가 김정일의 후계자인가?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붕괴론'이 부상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계획경제의 한계, 김일성 사망 후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자연재난 등의 영향으로 북한은 심각한 대기근을 맞이하게 되었고,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미국의 고위정보당국자는 김정일이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군부에 의해 축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연합뉴스, 1994/07/10). 하지만 북한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서 김정일은 3년 동안의 유훈통치를 마치고, 권력승계를 마무리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처음으로 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를 성공한 사례는 북한이기 때문에,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남이 외부 관찰자로부터 후계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단, 김정남은 김정일처럼 장남이다. 아직도 북한 사회에서 유교문화가 깊숙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남이 후계자로 거론되었던 것은 단순한 논리에 의한 예측이었다. 1999년 11월 한국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김정남이 후계자 수업을 위해 1999년 9월부터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지도원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영종 2010, 63). 2001년 1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김정남이 동행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연합뉴스, 2001/04/19). 하지만 김정남은 김정일이 약탈혼으로 낳은 자식이어서 후계자로 지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후지모토 겐지 2010, 120-121).<sup>2)</sup> 김정일이 김정남을 후계 구도에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2)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의 자식 사랑은 여느 부모와 다름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은 세 살부터 생일날마다 조선인민군 장령급 군관 계급장이 달린 제복을 선물로 받았으며, 여덟 살 때는 대원수 계급장을 받았다. 이때부터 김정남의 수행원들은 김정

김정남은 2001년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권력 중심에서 완전하게 배제되었다. 즉, 김정남은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되었으며, 잠재적인 정치적 영향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Lim 2012, 558).

2003년 3월, 조선인민군 출판사에서 발간한 「존경하는 어머니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중의 충신이다」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이 시기 적절하게 국내 언론에 입수되어 공개되면서(월간조선, 2003/03), 김정일과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김정철과 김정은이 후계 구도에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공개된 자료에서 고용희를 “존경하는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는데,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동지와 똑같은 분”이라고 하면서 고용희를 김정숙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았다(이수석 2010, 41). 김정숙은 김일성의 혁명동지이자 부인으로, 김정일의 어머니다. 따라서 고용희를 김정숙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고용희의 자녀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서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가계를 능가하는 업적과 능력을 갖춘 엘리트 가문이나 인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혈통에 의한 세습을 벗어나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웠다(연합뉴스, 2008/09/19).

이에 근거하여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기동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체제에서 동일 부모 밑에서 출생한 형제간의 서열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김정철이 당 조직지도부에서 후계수업의 핵심적인 코스를 거치고 있다는 근거로 김정은보다 김정철이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이기동 2004, 71). 정성장은 2002년부터 시작된 조선인민군 내부의 고용희 우상화, 2004년 4월부터 김정철이 당 조직지도부 요직에 임명된 사실에 대해 “김정철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김정은이 ‘삿별대장’으로 불리고 있는 사실과 김정일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보 등에 기초한 점들만 가지고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 가능성은 성급하다고 주장하였다(정성장 2004, 15-16)

이후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크게 힘을 받았다. 200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안보 및 북한 연구자 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김정남(7명), 장성택(5명), 김정은(2명) 순서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백승주 2008, 65-66). 이와 같은

---

남을 대원수 동지로 불렀다고 한다. 게다가 생일날마다 명예위병대의 사열도 받았다고 한다 (이한영 2004, 35-38).

결과는 후계자로서의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당시의 후계자 논쟁과 그 실태를 알 수 있다. 후계자로서 김정은을 주목했던 인물은 연구자가 아닌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와 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한 나라당 소속 정형근으로 요리사와 정치인 두 사람이었다.

2009년 1월 15일, 김정일이 후계자를 김정은으로 낙점하고 결정을 담은 ‘교시’가 당 조직지도부에 하달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보도되면서 김정일 이후의 최고지도자는 김정은으로 의견이 수렴되기 시작했다(연합뉴스, 2009/01/15).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 ‘김대장’으로 불리고 있다는 정보가 여러 차례 입수되었다. 2009년 6월 1일, 국가정보원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삼남 김정은이라는 사실에 대해 북한이 각국 주재 해외 공관장에게 외교 전문을 보낸 것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다(이영종 2010, 118). 오히려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단서가 되는 자료들이 입수되기 시작했다.

2009년 9월 8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조선인민군에서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이상화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고 배포한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하였다(데일리NK, 2009/09/08). 이 교양자료의 본문을 살펴보면 김정은에 대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꼭 닮은 선군령장”, “천재적 영지와 지략을 가진 군사적 영재”, “다재다능하고,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군사적 자질과 리더십을 갖춘 후계자로 선전하고 있는데(데일리NK, 2009/10/06),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특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군사주의적 성격을 김정은에게 부여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임재천 2014, 22).

과거의 후계자 논쟁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2009년 10월 6일 중앙일보 보도가 김정은으로 불리던 김정일의 뒤를 이을 후계자의 이름을 바로잡기 이전에는 국내 정보기관과 정부, 언론 등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김정은으로 파악하고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자 결정을 정보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이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이영종 2010, 33-35). 그리고 연구자들의 다음 논쟁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권력구조로 이어졌으며,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에 임명되자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권력구조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의 복원 혹은 정상화로 의견이 수렴되기 시작했다. 즉, 베일에 싸인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윤

곽이 드러날수록 예측은 정확성으로 다가갔다(고유환 2011: 정성장 2010).

## 2. 오늘의 후계자 논쟁: 김주애가 후계자인가?

김정은의 자녀 김주애라는 이름을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은 미국의 농구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Dennis Rodman)이다. 그는 2013년 김정은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김정은의 딸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무장과 남북관계 등으로 김정은 가계와 김주애에 대한 논의는 한참 동안 전개되지 않았으며, 김정은의 후계자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8일 북한의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공연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인공기를 흔드는 소녀가 공연을 마친 후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그 소녀의 등에 손을 얹는 리설주의 모습, 소녀의 공연을 보며 박수와 눈물을 보이는 김여정과 환하게 웃는 김정은의 모습 등이 조선중앙TV에 노출되었다. 이 장면을 근거로 그 소녀가 김정은의 딸 김주애라는 추측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중앙일보, 2022/09/25). 하지만 그 소녀는 김정은의 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11월 19일, 로동신문에서 김정은이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참관한 소식을 보도하였는데, 보도사진에서 처음으로 김주애로 불리는 김정은의 딸을 공개하였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리설주와 함께 “사랑하는 자제”로 호명되었다(로동신문, 2022/11/19). 2022년 11월 17일, 로동신문에서는 김정은이 화성포-17형 시험발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을 보도하였는데, 김주애도 함께 촬영하였으며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명되었다(로동신문, 2022/11/27).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우표를 제작하였는데,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우표로 제작하였다. 2023년 2월 8일, 로동신문에서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호명하면서 호칭을 격상시켰다(로동신문, 2023/02/08). 그날 밤에 거행되었던 열병식에서 김주애는 김정은과 나란히 주석단에 오르며 열병식을 관람하였다. 열병식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백두혈통 결사옹위” 구호를 계속 외쳤고, 조선중앙TV는 수시로 김주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2023년 9월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측근 엘리트인 박정천 조선인민군 차수가 특별석에 앉아있는 김주애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귓속말하는 장면은 외부 관찰자들에게 김주애 후계자 내정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김주애가 처음 등장하였을 당시 통일부는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졌다. 하지만 김주애의 빈번한 등장, 특별한 의전, 엘리트들의 행동 등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주애를 북한 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TV조선, 2023/12/07).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정보기관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평가하였다(연합뉴스, 2024/01/04). 즉, 정부와 정보기관이 김주애 후계자 내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도 김주애가 이미 후계자로 내정되었으며, 후계자 수업단계 중인 것으로 보았다(이데일리, 2023/03/02).

연구자로서 김주애 후계자론을 가장 처음 주장한 것은 정성장이었다. 그는 김정은도 8세 생일날 김정일로부터 찬양가 <발걸음>을 선물로 받으면서 후계자에 내정되었고,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후계자 내정 사실을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조기에 공표함으로써 근거 없는 억측이 도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미래의 후계자에게 어려서부터 간부들과의 폭넓은 접촉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정성장 2023a, 2023b). 그러면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덟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김주애 후계자 내정에 대한 8가지 근거

순번	주요 내용
1	김주애에 대한 ‘존귀하신’이라는 수식어는 최고지도자에게만 사용했던 표현으로 절대권력자를 의미
2	김주애에 대한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은 김정은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후계자로 선택한 것이 당연
3	당 핵심 인물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라는 언급한 것은 김주애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시사
4	2023년 2월 8일 열병식에서 백두산 군마와 바로 뒤의 김주애의 백마를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군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곧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를 이어서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을 상징
5	또한 열병식 참가자들이 “김정은 결사옹위, 백두혈통 결사보위”라는 구호를 외치면

순번	주요 내용
	서 조선중앙TV는 김주애를 수시로 비추었는데, 이는 “김주애 결사보위”를 외친 것과 다름없음
6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연회에서 김주애가 정중앙에 앉아있고, 군 고위간부들이 병풍처럼 뒤에 있는 사진은 김정은이 군부 핵심 인물들에게 김주애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니, 잘 모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7	북한 조선우표사에서 김정은과 김주애가 조선인민군 병사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한 사진을 우표로 발행한 것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처음 등장한 후 북한 매체들이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초점을 맞춘 사진을 계속 게재한 것과 연상됨
8	북한에서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에게 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조치는 없었을 것

\*출처: 정성장(2023a)

이후 김주애 후계자 내정에 대한 근거는 더해졌다. 2023년 11월, 자유아시아방송은 평양시 당,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간부들을 대상으로 당 조직지도부가 진행한 강연회에서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셋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라고 언급된 내용을 보도하였다(자유아시아방송, 2023/11/27). 김일성을 이상화하는 대표적인 조선예술영화 <조선의 별>에서 알 수 있듯이 별과 셋별은 각각 최고지도자와 후계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정성장은 김주애의 공개적인 행보와 연결하여 김정은이 김주애를 ‘조선의 셋별 여장군’으로 키우고자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정성장 2024, 9). 또한,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제1비서 직책을 신설하고 비공개했던 것을 놓고, 2023년 1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주애를 ‘제1비서’직에 선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24년부터 김주애가 확실한 2인자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았다(정성장 2024, 9).

반면에,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에 대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홍민은 “항일무장투쟁에 전통을 둔 남성 중심적 군사문화 속 군 최고사령관, 핵무기 통제 결정권자로 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김주애의 등장은 “청년, 미래세대를 키워드로 내세운 행사에 상징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자 “새로운 세대를 아우르는 결속과 통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을출은 “북한체제 속성상 후계자가 갖는 엄청난 무게, 대내외적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내정과

지명 구분도 무의미”한 것으로 “식량난 해결 등 난제가 쌓인 상황에서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자 수업을 쌓게 하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가 될지도 의문”으로 보인다면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부인하였다(헤럴드경제 2023/02/26). 남성욱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면 서, 군사 분야에 집중된 김주애의 등장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이 영원히 후계세대에도 지속한다는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비주얼 마케팅 전략”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진단하였다(남성욱 2023, 125-128). 최경희는 북한의 가부장적 유교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김주애의 권력승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김주애가 권력을 승계하였다고 가정할 이후 다른 성씨를 가진 인물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김정은이 딸을 후계자로 선택할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최경희, 2023/09/11).

이처럼 김주애 후계자 내정에 대해 북한 연구자들은 입장과 분석을 달리한다. 그리고 연구자 간에 김주애 후계자 내정 여부를 둘러싸고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참여하게 대립하는 양상도 보였다(한국경제, 2023/02/27).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자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2024년 3월 15일, 강동종합ოს일 준공식에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참석하였는데,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은과 김주애에게 “향도의 위대한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노동신문, 2024/03/16).<sup>3)</sup> 북한에서 향도란 “혁명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정성장은 “현재 김주애의 후계체계 구축은 기본적으로 ‘내정과 후계수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김정은의 공개적 성격으로 인해 과거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 과정의 ‘대내적 공식화’와 ‘대외적 공식화’ 단계에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분석하였다(정성장, 2024/03/17). 이와 정반대로 양무진은 김주애의 후계자 수업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개인 우상화는 아직이고, 이름도 직접 거명되지 않은 만큼 후계자로 최종 내정됐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았다(조선일보, 2024/03/16).

그렇다면 김주애의 등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둘러싼 논쟁의 한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북한의 후계자는 왜 중요한 관심사이며,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3) 당일 조선중앙TV 오후 보도에서는 “향도의 위대한분들”이라는 표현은 생략되었다.

## IV. 후계자 논쟁에 대한 성찰과 4대 세습 전망

### 1. 근거에 대한 비판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둘러싼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비판적 요소가 있으며,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부인하는 연구자들은 대체로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사회적 위상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 보위원, 보안원, 군관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많아졌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였다. 여성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 경제적 영역에서 지배인, 작업반장, 분조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였다(이우태 외 2023, 342-343). 이는 위에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선전선동 분야를 담당하는 김정은의 친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고지도자의 의견을 담당하는 현송월 당 중앙위원회 위원, 미국과의 핵협상에 나섰던 최선희 외무상 등 김정은 시대 북한정치 무대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외부 관찰자들에게 이미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여정은 만경대 가문의 일원으로 선전선동 분야에서 김정은의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변화상을 고려한다면 가부장적 유교문화를 근거로 김주애를 후계구도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부족한 정보를 기반으로 논쟁이 전개된 측면이 있다. 이는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주장한 측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김정은의 자녀가 몇 명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한 미디어를 제외한다면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을 분석할 수 있는 확인된 정보는 없다. 조선중앙TV에서 드러난 김주애에 대한 호칭과 의전마저 연구자들마다 분석을 달리한다.<sup>5)</sup> 이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근거가 되었다. 먼저, 북한 당국이 김주애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애라는 이름

4) 김여정은 2015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임명된 이후 로동신문을 색채로 발행하거나 입체감 있는 조선중앙TV 영상화면 개선, 심야 열병식 계획 등 자신의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5) 필자의 분석을 언급한다면, 본 글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개명을 강요당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당 조직지도부가 진행한 강연회에서 김주애에 대한 이상화는 사실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화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당 조직지도부가 담당하고, 실무는 당 선전선동부가 담당한다. 당 조직지도부가 진행하였다는 보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게다가 이상화 교재인 정치사상교양 자료는 문건으로 작성되어 하달된다. 문건이 입수되어야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즉,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오경섭 2023, 2).

셋째, 북한의 후계자 내정 시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sup>6)</sup> 핵심 쟁점은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 여부이다. 북한의 후계체제는 과거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시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장은 각각 다르다. 과거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근거로써 김주애 후계자 내정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성장은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시기를 김정은의 8번째 생일이 되는 날로 주장하였다. 그 근거는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의 증언을 인용하였는데, 김정은의 생일날 김정일은 그의 측근들에게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정성장 2023b). 이를 근거로 정성장은 어린 김주애도 후계자로 내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흥석은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흥석, 2023/02/23). 강정일은 김정남과 김정철이 후계자로서 김정일의 신임을 얻지 못한 2006년 이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분석하였다(강정일 2023, 271).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규정함에 따라 김주애 후계자 내정과 관련하여 주장과 근거가 연구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 어쩌면 후계자 논쟁의 순서가 뒤엉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후계자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부족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장은 억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2000년대 백세봉이라는 인물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을 때,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백두산 세 봉우리(김일성, 김정숙, 김정일)를 축약한 김정철의 가명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백세봉은 제2경제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확인되었다. 폐쇄적인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후계자 내정에 대한 논쟁보다 모든 가능성

6) 엄밀히 말하자면 연구자들마다 권력승계 단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을 열어두고, 김주애의 등장과 의미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 2. 김주애 등장의 의미

김주애의 등장은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자녀를 공식 석상에서 빈번하게 공개한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향후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북한 후계체제의 확립과정에 있어서 큰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은 그러한 단계는 아니며, 후계자 논쟁으로 확장되지 못한 논의를 해야 한다. 김주애의 등장은 남북한 모두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혈통에 의한 4대 세습 의지를 공고히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북한의 만경대 일가는 건재하며, 수령제가 작동하는 독재국가임을 과시하였다. 특히, 김주애에 대한 군부 핵심 엘리트의 거수경례와 사열 등은 조선인민군이 수령의 군대로서 만경대 일가와 4대 세습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지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4대 세습과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권력승계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핵무기를 통한 미래세대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고 있다. 김주애가 처음으로 등장한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행보를 보면 군사 분야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2022년 11월 18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대한 로동신문 정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날의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 당국은 “명실상부한 핵강국,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유국의 힘과 위용이 다시금 천하를 진감”하였으며, “주체조선의 국위가 더한층 높아지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낼 절대의 힘을 지닌 강대한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기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한 북한 여성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아래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라며 선전하였다(로동신문, 2022/11/20). 이는 핵무기를 통해 4대 세습의 열렬한 지지자인 미래세대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7)</sup>

7) 현재 북한의 10~20대 연령층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핵무력 완성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세대이다. 따라서 과거에 국내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고 자란 세대들과는 다르게 김정연에 대한 지지와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이 높다(김병로 2022, 116-142). 따라서 현재

셋째, 아내 리설주에 이어서 자녀를 공개함에 따라 김정은은 인민친화적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까지 로열패밀리로 불리는 최고 지도자의 가정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극비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시대의 김성애는 리설주처럼 퍼스트레이디(first lady)가 아닌 정치인에 가까웠다. 그러나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리설주와 동행하여 현지도를 다녔으며, 노인을 공경하거나 주민들과 스킨십을 통한 인민친화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김주애의 등장은 인간적인 수령의 모습과 가정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주의 대가정’을 고수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체제안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4대 세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일인독재체제를 미래에도 목격해야 하며,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김주애 등장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함의이며, 후계자 내정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확장된 논의와 과제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 3. 북한의 4대 세습 공식화 과정과 전망<sup>8)</sup>

김주애에 대한 후계자 내정 여부는 연구자들마다 분석을 달리한다. 하지만 북한이 4대 세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며,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내정은 공식적인 결정 혹은 공식화가 아니며, 검증과정에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강정일, 2023, 283-284). 이에 따라 후계 구도에 김주애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후계 체제를 공고화할 것을 염두하고 전망하는 것은 후계자 논쟁의 확장된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4대 세습을 전망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의 후계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후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려고 할 것이다. 김정일은 만경대혁명학원, 남산제1중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등 인재들만 모여있는 우수한 학교에서 정식 교육과정을 마쳤다. 김일성종합대

---

북한에서는 새로운 혁명 세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4대 세습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될 것이다.  
8) 후계체제 공식화는 대내적 공식화 단계를 거쳐 대외적 공식화 단계를 통해 마무리된다. 본 글에서 후계체제 확립과정은 후계자 내정부터 대외적 공고화 단계까지를 범위로 한다.

학을 졸업한 김정일은 곧바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후계자로서 역량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스위스 베른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는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군사주의적 자질과 리더십을 터득하여 선군정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김정일의 배려였으며,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군사주의적 자질과 리더십은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임재천 2014, 21-22).<sup>9)</sup> 그래서 김정일의 후계자도 교육과정을 마친 후 후계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공식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sup>10)</sup>

둘째, 핵심 엘리트 집단을 중심으로 후견인 그룹을 형성할 것이다(Mesquita et al. 2005). 권력승계는 기본적으로 세대교체를 수반함에 따라 엘리트 재편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북한의 후계자는 자신과 운명공동체를 형성할 엘리트를 포섭하면서 권력승계 이후 체제안정을 담보했다. 김정일은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동료들 및 그들의 자녀들과 교류하면서 성장하였으며, 정치에 입문한 이후 은밀한 파티를 개최하여 자신의 후견인 그룹을 형성하였다. 김정일은 어려서부터 김정일의 측근들과 교류하였으며, 김정일이 신임하는 핵심 엘리트와 친인척을 중심으로 후견인 그룹을 형성하였다. 빨치산파로 불리는 핵심 엘리트 집단은 후계 체제에서 항상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따라서 김정일의 후계자는 친인척과 빨치산파 후손들을 중심으로 후견인 그룹을 형성할 것이다.

셋째, 4대 세습을 위해 후계체제를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이상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규범적 권위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후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1974년 2월,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출되면서 후계체제를 대내적으로 공식화했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북한에서 ‘당 중앙’으로 호명되었고,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당중앙을 무장으로 보위하자> 등의 김정일 찬양가가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시작

9) 김정일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마쳤다는 사실을 파격적인 특혜이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연대장 혹은 사단장 이상의 군사지휘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 군관(장교) 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정성장 2013, 36).

10) 후계자에 대한 역량과 자질은 후계자론에서 설명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예지력과 탁월한 령도력, 인민적 품성과 고매한 덕성” 등을 가리킨다(김재천 1989, 38-52).

11) 물론 이상화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후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입수될 가능성이 있다.

했다(중앙일보, 1994/10/30). 후계자 김정일을 환영하기 위해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군부대들은 집회를 열고 ‘김정일 동지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라는 내용의 결의문과 충성 서약서를 연달아 채택했다(손광주 2003, 107-108). 게다가 1975년부터 모든 군부대 병영생활관, 사무실 등에서 김일성 초상화와 함께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리게 되었다(이대근 2003, 68).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는 단계에서 ‘김대장, 청년대장’ 등의 은유적인 표현이 등장하여 북한 사회에서 불리기 시작했다. 2009년 초기부터 후계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대대적으로 보급되었으며, 일부 공공장소마다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문구인 “장군복, 대장복 누리는 우리 민족의 영광, 만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라는 선전벽보가 게시되었다(동아일보, 2010/01/09). 그리고 조선인민군 구성원들과 당 간부 및 당원들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비범함과 천재성을 선전하는 우상화 교재로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에 대한 위대성 자료」가 배포되었다(윤황 2013, 65-70).<sup>12)</sup> 황해도에서 교원을 했던 탈북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A4용지 50페이지 정도의 김정은 위대성 자료가 2009년 2~3월에 교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자료가 배포된 후 학생들에게 김정은의 존재에 대해 알렸다고 한다(이영종 2010, 128-129). 즉, 북한의 전체 학교에서 김정은 위대성 자료를 기반으로 3대 세습의 정당성과 김정은 우상화에 대한 교육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2009년 4월 20일에 시작된 150일 전투와 2010년 4월 14일 대동강변에서 진행한 태양절 축포야회 등을 김정은의 지도와 업적으로 추진되고 실행되었다고 하면서 억지스러운 후계자 업적 쌓기를 선전하기도 하였다(이영종 2010, 174-184).<sup>13)</sup>

이처럼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은 사회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

12)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에 대한 위대성 자료」에서는 김정은에 대해 “백두산형의 장군, 후계자로서 충실성의 귀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풍모 체현위인,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 천재중의 천재, 군사의 영재, 무적필승의 청년장군, 천하제일 명사수, 장군형의 위인, 검박하고 소박하고 겸손하신 품성의 소유자, 병사들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의 소유자”로 선전함으로써 비범성과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다(윤황 2013, 67-68).

13) 2010년 4월 14일 평양 대동강에서 태양절을 기념하는 축포야회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를 보도하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강행군길에 척척 발걸음”을 맞추고 하였다(이영종 2010, 174).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 ‘발걸음’이라는 단어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찬양가를 의미했다. 이 장면을 본 북한 주민들은 충분히 후계체제에 대한 축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맞이하였기 때문이다(김일성 1994, 100). 따라서 4대 세습을 위한 후계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정당성과 정통성, 절대성 등을 중심으로 후계자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등장할 것이며, 찬양가를 비롯한 우상화 교재가 대대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계체제는 조선노동당을 통해 공고화될 것이다.<sup>14)</sup> 즉, 후계자 내정의 사후적인 조치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추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이다. 당을 통한 결정은 절대적인 복종과 정당성을 갖는다. 김정일은 1974년 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99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권력승계를 마무리하였다. 김정일은 선군정치하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 대신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한 측면이 있지만,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은 당의 지도력을 활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내부적으로 공식화했다. 그리고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자신이 김정일의 후계자임을 대외적으로 공고화하였고,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2012년 4월에 개최된 제4차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여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되면서 권력승계를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후계체제는 지도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정당성을 갖도록 당 최고지도기관이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여기서 발견되는 또 다른 공통점은 후계자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당 규약에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당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후계자는 교육과정을 마친 뒤 18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을 것이다.

## V. 나가며: 북한의 4대 세습과 우리의 과제

2000년대 후계자 논쟁에서 김정은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보란 듯이 후계자로 결정되어 현재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 후계자 논쟁 당시에도 지금까지와 자료가 부족했지만, 2009년 1월 김정일의 후계자 결정이 당

14) 당 규약 제23조에서는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수반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후계자와 주요 엘리트는 당 최고지도기관을 통해 선출된다.

조직지도부에 하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차례대로 입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글은 부족한 정보에 의한 예측과 근거가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을 낳았고, 2020년대에 재연된 후계자 논쟁이 확장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4대 세습은 우리에게 과제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김정은의 후계자가 핵무기를 물려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의 후계자는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와 함께 할 북한의 지도자가 될 인물로 중요하다. 김정은의 후계자는 혈통에 의해 권력을 세습할 것이며, 핵무기를 그대로 물려받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김정은의 후계자가 권력을 승계한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채 우리와 대치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과 일관된 자세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신종대 2023, 180).

연구자의 시각에서 김주애의 등장과 후계자 내정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실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김주애의 등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된다면 김주애의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당과 국가 기관, 사회조직, 교육기관 등에서 간부들이 김주애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전한 내용이 있었는지, 주민들 간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여전히 북한연구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아직 누구나 동의할 정도의 정보와 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계자 논쟁은 무의미하다. 현재로서는 4대 세습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은은 10대 원칙과 혈통승계에 따라 자녀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후계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계자 내정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보편적인 시각에서 후계체제 공고화 과정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한 논의는 재연된 후계자 논쟁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사실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후계자는 권력을 승계하였을지라도 체제의 보수성을 혁신적으로 타파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대기근 상황에서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대외적 메시지를 내놓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였다(박형중 외 2004, 18-19). 따라서 4대 세습과 관련한 논의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고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일성(1984). <김일성저작집 제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94). <김일성저작집 제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재천(1989).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 출판장소 미상.
- 박형중 외(2004).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 손광주(2003). <김정일 리포트>. 서울: 바다출판사.
- 유호열(2004).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좌절>. 서울: 생각과 나무.
- 이대근(2003).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파주: 한올아카데미.
- 이한영(2004). <김정일 로열패밀리: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수기>. 서울: 시대정신.
- 이영종(2010).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품플러스.
- 이우태 외(2023). <2023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정성장(2013).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성남: 세종연구소.
- 정영철(2005).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서울: 선인.
- 후지모토 겐지 지음. 한유희 옮김(2010).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서울: 맥스 미디어.
- Levitsky, Steven and Way, Lucan A.(2010).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Mesquita, Bueno de et al(2005).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 Svolik, Milan W.(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강정일(2023). 권위주의 체제이론으로 본 북한 권력승계 과정과 특징.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 고유환(2011).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 김병로(2022). 북한실태인식.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남성욱(2023). 김주에 앞세운 김정은의 광장정치: 북한의 관심 끌기 전략일 뿐 후계는 어불성설. <월간중앙>, 2023년 4월호.
- 백승주(2008). 김정일 이후 북한의 후계체제 성격과 대외정책 방향 전망. <정책연구>, 통권 158호.
- 신종대(2023).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검토와 과제: 국내 수준의 합의 도모와 성

- 과 추구. <현대북한연구>, 26권 3호.
- 오경섭(2009).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세종정책연구>, 제 6권 1호.
- 오경섭(2023). 북한의 4대세습과 김주애. <Online Series>, CO 23-10.
- 윤항(2013).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이상화 실태에 관한 분석. <북한학보>, 28집 2호.
- 이기동(2004). [심층분석/김정일 후계구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고영희의 아들인 '김정철과 김정운 유력'. <북한>, 통권 제388호.
- 이수석(2010). 김정일 후계구도와 북한체제 전망. <통일연구>, 제14권 제1호.
- 임재천(2014).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성장 과정 및 사상적 기반, 정당성, 리더십 특징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9권 1호.
- 정성장(2004). 고영희 사망과 북한의 후계구도. <정세와 정책>, 2004년 10월호.
- 정성장(2010).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 14권 제2호.
- 정성장(2023).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8가지 이유. <세종논평>, No. 2023-02.
- 정성장(2024). 2023년 북한 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정치·외교·대남 분야. <IFES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3.
- Brownlee, Jason(2007).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4).
- Jung, Jai-Kwan and Joo, Hyung-Min(2021). "What We Murrmur behind Their Backs": Hidden Transcripts of the North Korean Ruling Elite. *Problems of Post-Communism*, 70(1).
- Lim, Jae-Cheon and Yoo, Ho-Yeol(2010).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ult of the Kims: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political succession.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2(3).
- Lim, Jae-Cheon(2012).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Comparing Two Key Transitions in the DPRK. *Asian Survey*, 55(3)
- Rush, Myron(1978). The Problem of Succession in Communist Regim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32(2).
- 김동엽(2023/12/18). [한반도포커스] 전문가와 점쟁이 사이. <국민일보>.
- 이흥석(2023/02/23). [칼럼] 후계자와 이상화. <아시아투데이>.
- 정성장(2023/08/21). 김주애가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GLOBAL NK>.
- 정성장(2024/03/17). 김주애에 대한 '향도의 위대한 분' 표현 사용 의미 평가. <쿠키뉴스>.
- 최경희(2023/09/11). 김정은의 어린 딸 김주애 등장 의미와 시사점. <GLOBAL NK>

- <동양일보>. 2010/01/09. “北, 김정은 생일 “백두혈통” 특집보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109/25291145/1>> (검색일: 2024.04.01.).
- <데일리NK>. 2009/09/08. “日 마이니치, 김정운 이상화 교재 입수 주장” <<https://www.dailynk.com/%e6%97%a5-%eb%a7%88%ec%9d%b4%eb%8b%88%ec%b9%98-%ea%b9%80%ec%a0%95%ec%9a%b4-%ec%9a%b0%ec%83%81%ed%99%94-%ea%b5%90%ec%9e%ac-%ec%9e%85/>> (검색일: 2024.04.01.).
- <데일리NK>. 2009/10/06. “마이니치 보도 3남 ‘김정은 이상화 강연자료’ 전문” <<http://www.dailynk.com/%eb%a7%88%ec%9d%b4%eb%8b%88%ec%b9%98-%eb%b3%b4%eb%8f%84-3%eb%82%a8-%ea%b9%80%ec%a0%95%ec%9d%80-%ec%9a%b0%ec%83%81%ed%99%94-%ea%b0%95/>> (검색일: 2024.04.01.).
- <연합뉴스>. 1994/07/10. “북한軍지도부, 金正日 축출 가능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780253?sid=104>> (검색일: 2024.04.01.).
- <연합뉴스>. 2001/04/19. “김정일 장남 김정남 후계자 수업<廣角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066971?sid=104>> (검색일: 2024.04.01.).
- <연합뉴스>. 2008/09/19. “北 권력, 혈통승계 가능성 높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274006?sid=100>> (검색일: 2024.04.01.).
- <연합뉴스>. 2009/01/05. “소식통 北김정일, 3남 정운 후계자 지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455904?sid=100>> (검색일: 2024.04.01.).
- <연합뉴스>. 2024/01/04. “국정원 ‘김주애, 현재로선 유력한 北후계자·변수 많아 주시’(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4027751001>> (검색일: 2024.04.01.).
- <이데일리>. 2023/03.02. “김정은 딸 김주애, 후계자 내정돼 지도자 수업 시작한 듯”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25926635539384&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24.04.01.).
- <월간조선>. 2023/03. “북한, 3대 권력세습 결정 - 강연자료(2002년 8월) 조선인민군 출판사 (대외비 자료 全文)”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303100022>> (검색일: 2024.04.01.).
- <자유아시아방송>. 2021/12/17. “김일성의 친동생, 김명주의 죽음”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12172021103502.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12172021103502.html)> (검색일: 2024.02.24.).
- <자유아시아방송>. 2023/11/27. “북, ‘조선의 섯별’ 김주애 신격화 공식 선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kjaidolization-11272023091706.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kjaidolization-11272023091706.html)> (검색일: 2024.03.22.).
- <조선일보>. 2024/03/16. “훗쩍 자란 김정은 딸에 ‘향도’…“차기 지도자 강력 시사””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3/16/NQZSVAR6ARRHQLFVUYZZEWWFFL5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3/16/NQZSVAR6ARRHQLFVUYZZEWWFFL5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검색일: 2024.03.17.).
- <중앙일보>. 1994/10/30. “김정일 찬양노래 400여곡 창작보급-권력승계 20년전부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961997>> (검색일: 2024.02.03.).

- <중앙일보>. 2022/09/25. ""김정은 딸 김주애, 北 국가행사 첫 포착...이철주 직접 챙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4353>> (검색일: 2024.03.25.).
- <한국경제>. 2023/02/27. "北 김주애 후계자?...''공개 토론하자'' 설전 붙은 학자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2274262i>> (검색일: 2024.04.02.).
- <헤럴드경제>. 2023/02/26. "뜨거워진 北 김주애 후계자론...''후계자 당연'' vs ''근거 턱없이 부족''"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22600010>> (검색일: 2024.02.17.).
- <TV조선>. 2023/12/07. "北 김주애, 4대 세습 유력 후계자...''조기 등판 가능성''"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07/2023120790007.html](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07/2023120790007.html)> (검색일: 2024.03.15.).
- 로동신문(2022/11/1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로동신문(2022/11/20). "[정론] 조선로동당의 엄숙한 선언."
- 로동신문(2022/11/2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로동신문(2023/02/0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절을 맞으며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고 기념연회에 참석하시였다."
- 로동신문(2024/03/16). "위대한 위민헌신의 장정우에 솟아난 눈부신 사회주의재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동종합운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하시였다."

## North Korea's Succession of Power and Renewed Successor Debate

Baek, Seung-kuk

Korea University

Kim, Tong-ook

Korea University

### Abstract

North Korea maintains its regime through a three-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During the Kim Jong-il era, there was an academic debate over who would become the successor. At that time, Kim Jong-nam and Kim Jong-chul were considered as strong candidates, and Kim Jong-un was not in the spotlight as a potential successor. However, Kim Jong-un is currently ruling North Korea as Kim Jong-il's successor. In November 2022, the succession debate was rekindled when Kim Jong-un publicly introduced his daughter. The renewed debate began with claims that Kim Jong-un's daughter, Kim Ju-ae, had been designated as the successor. The discussions among researchers regarding Kim Ju-ae are inherently exhaustive due to limited information and resourc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Kim Ju-ae's emergence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consider the future of North Korea under a potential fourth-generation succession. It is likely that Kim Jong-un will implement a fourth-generation succession, and we may continue to face a nuclear-armed North Korea in the future. Thus, the (south korea)government should take action to prevent Kim Jong-un's successor from inheriting nuclear weapons. Additionally, for a research projec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fourth-generation succession and the emergence of Kim Ju-ae based on data obtain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refugees who witnessed her emergence. In conclusion, in the absence of widely accepted information and data, the succession debate is meaningless. At present, it is advisable to focus on the significance of the fourth-generation succession itself, rather than on a specific individual.

Key  
words

Kim Jong-il, Kim Jong-un, Kim Ju-ae, Successor, The Four Succession



## Between Nation and the State\* :

### The Formation of the Populistic Vertical Antagonism in South Korea by Colonial Legacies and Anti-Communism

Hyeonjun Kim

Senior Research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junkim62@gmail.com

#### Abstract

This study argue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patial and temporal imagination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nation-building yields populistic political antagonism as vertical, especially in South Korea. In this vein, this study first discusses the implantation of the word 'people' and other competitive terms like 'nationals' and 'nation' during and after the colonial rule. After that, the time-space of independence will be discussed based on how the political associations were formed during the military rule by the US Army. Lastl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absence of horizontal political cleavage under the electoral democracy in South Korea had been due to colonial legacies and strong anti-communism, which is even relevant to the recent political history in Korea.

#### Key words

nationalism, theories of the state, populism, anti-communism, Korean politics

원고투고일 2024년 5월 1일 | 원고심사일 2024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21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B5A17088607). This work is a revision of the Chapter Four of author's doctoral thesis (Kim, 2023a,b).

## I. Introdu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temporal and spatial discrepancy between the state (state-system) practice and the imaginal borders perceived by people who consider themselves members of the nation (state-idea, Abrams 1988[1977]). Many political scientists in South Korea have already discussed a similar discrepancy with the term ‘simultaneity of the non-simultaneous’ borrowed from the concept by Ernst Bloch, indicating that a situ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llows the Westernised standards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while overcoming, re-inventing, or denying the limit or inheritance of tradition or underdevelopment (Park 1996, 59-60; Kang 2012; Im, H. B. 2014). This study takes their points of view while emphasising the exigency of temporality and the duality of the spatial imagination of nation-states as the source of the elements of populistic (not entirely populist) styles in Korean politics.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constructing and re-signifying people in the nation-state in the context of post-colonial nation-state building with the spatial division of the n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wo-state systems in one n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is unique regarding the conformity in the range of nation and state in the globalised nation-state system. Nationalism in Korea is characterised by a ‘nationalism complex’ (Kang 2012), which means the two state-systems compete over the legitimacy of claims about constituting the one state-idea of the nation. The post-colonial nation, which had undergone Japanese colonial rule, faced the absence of a legitimate state institution in 1945. Instead, the end of the Korean War ushered the nation-building process of the two post-colonial states, which also meant making people ‘people’ in the postwar system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n this situ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term ‘people’ was questioned by the popular masses and the elite, who

identified as rulers of the burgeoning nation-state. Besides, the divis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into a two-state institution (ROK, DPRK) is far from the conventional ideal, the 'nation=state formula' (Balibar 1991, 93; Hobsbawm 1992, 19; Gellner 2006, 1-7), which is generally accepted as an ideal of the modern national state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heritage of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Due to the ideological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tate-systems of ROK and DPRK,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Left-Right politics cannot proceed in South Korea because the Left has been politically taboo. This scene is far different from the Left-Right competition in the plural,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in which those two camps serve as 'orientational metaphors', depicting the political disagreement among *mutual equals* (italics added, Dyrberg 2003, 336-338). For the people who lived at the frontline of the Cold War system in South Korea, being called or calling themselves '좌파 (*iwapa*, 左派)', which refers to 'the Left', has the same meaning as being the public enemy. In this asymmetry and inequality between the two poles on the political spectrum, the language of the term nation was the alternative indication which can be used to identify political competitors to the ruling blocs with anti-communism, developmental nationalism, and military and authoritarian regimes. North Korea and its communist regime were considered far away from or abject but mythical by people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recent studies on the vertical antagonism of populism (Laclau 2005; Mouffe 2018; De Cleen and Stavrakakis 2017), this distance constructed the images of North Korea as the state high above in North somewhere or dangerous communists low below infiltrated our democratic society of South Korea, while the frontier between the Left and Right was absent or blurred. The horizontal frontier of nationalism replaced that spectrum, but the signifiers of the Left and communism belonged to the enemy and were nationally wrong, overlapped with the image below. It is how the concept of the 'internal

outsider', indicated by Brubaker (2017), has been constructed in South Korea under the reality of the Peninsula's division.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popular sense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nation and the state is the primary source for various forms of nationalism, and such variation is the engine for the dynamics of antagonistic politics between in and out and high and below in the political scene of South Korea.

## II. Theories and Contexts

### 1. Theoretical discussion

Contrary to the general model for Western countri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simultaneously experienced nation-building and state-building processes. As Freeden (1998) argued, nationalism as 'a thin-centred ideology' supplements its deficiency of a structural inability to provide a political programme with its value system by selectively including or excluding, correlating or suppressing the other ideological concepts within the contextualised circumstance. As nationalism cannot originally stand-alone, nationalism in Korea morphed itself, entangling with the discourses during the state-building process combined with the ideological competition between the Left and Right. The nation is defined *over time* with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hereas the people are defined *over space* within the boundary of the state as a source of legitimacy and political sovereignty (*italics original*) (Yark 2001, 520-523). After independence, while the state's boundary was not evident in the absence of the state, the question of which people had existed *in advance* (*italics added*) (Balibar 1994, 93) was raised. In this context, post-colonial Korea was defined as a 'time-space for the people' where the signifier 'people' overflowed in

almost all parts of society (Im, C-M 2014, 193).

In the Marxist tradition, nationalism has been under conundrum as it seems to contradict the internationalism of workers' unity, and the nationalism movements around the soviet regions were becoming an issue during the 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Lenin 2020[1917]; Stalin 1913). However, as self-determination could also be accompanied by social movements, the early Stalin also conceded it as it helped the regional integrity towards the communist party based on the same language and schooling (Stalin 1913, 67-68). A neo-Marxist like Étienne Balibar (1991) is close to conceding the reality that nationalism is an inevitable issue to understand the capitalist society, and his adoption of Benedict Anderson's *Imagined Communities* (2006[1983]) is intended from the perspective that a nation is "the persona ficta of the juridical tradition in the sense of an institutional effect" (Balibar 1991, 96) in relation with the state institution. Combining the argument of Anderson and Balibar, as neither the illusional ideology nor the unchangeable and fixed character, the nation is influential to people as it provides how people conceive the political community as a matter of their everyday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This is why this study adopts the Andersonian view on nationalism, which is accompanied by how people imagine their entity with language and time-space cultural system.

## 2. Contextual discussion: Politics of Vocabulary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Colonial Rule<sup>1)</sup>

In this respect, the competing concepts of 'nation' (민족, 民族, *minjok*), 'people' (인민, 人民, *inmin*), and 'nationals' (국민, 國民, *gungmin*) became

---

1) From now on, the word people without quotation marks ("") will be used to indicate people generally meant in the literatur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When the contextualised meaning in Korea (인민, *inmin*) is indicated, it will be quoted as 'people'. This is the same with other words, such as nation ('nation', 민족, *minjok*) or nationals ('nationals', 국민, *gungmin*).

entangled, intersubjectively constructing each other during the nation-state building process in Korea. This phenomenon was not confined to politics, but those words with the meaning of community explosively appeared in contemporary poems with differentiated and invested purposes by poets (Kang 2008), indicating the prevalence of those concepts' application in everyday life. For the Left-wings, 'people' were considered to exist before the state was preferred, while the Right-wings and nationalists preferred 'nationals', referring to the members inside the state's boundary (Kim 2009, 74). However, as both groups prioritis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ideological competition, the meanings of 'people' and 'nationals' were politicised while the two states of ROK and DPRK were simultaneously nationalised (cf. Yark 2001).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born as *gungmin* ('nationals') in South Korea and *inmin* ('people') in North Korea, both endowed with the state-centred meanings of the 'unitary nation' (단일민족, 單一民族, *danilminjok*) after the Korean War.

Before colonial rule, the term nation was seldom found in newspaper articles other than to refer to the people or nationals (Kwon 2007). When the concept of a nation was introduced to Korea, the word was similar in meaning to race or ethnicity because it was differentiated with nationals, which implied the *persona ficta vis-a-vis* the state (Park 2008, 97-99). It is the colonial legacy that popularised the term nation. For example, in a newspaper, Korea Daily News (대한매일신보, *Daehanmailshinbo*), published by the English journalist Ernest T. Bethell, the frequency of the term nation had rapidly increased from zero in 1905 to 139 in 1908 following the invasion of Japan (Kwon 2007, 198). In these times, the general public was referred to as people or the whole subjects (백성, 百姓, *baekseong*) in political contexts, and the usage of the latter decreased as the fate of the Joseon Dynasty monarchy gradually faded and ended in 1910, followed by 36 years of Japanese occupation. The word 'nationals' also experienced an increase in its usage with 'nation' (Kwon 2007, 198). Rather

r, 'nationals' was more frequently used than 'nation' as the political subject in need of liberation from the early stage of the rising moment of colonial rule, around 1907 (Park 2008, 116). This phenomenon implies the political situation that the popular perception of the crisis in sovereignty due to the threats from the imperial aims of invasion, especially from the requirement of being a 'new people' in the modernised world who needs the restoration of sovereignty (Park, 2008, 116). The point is that 'nationals' and 'people' were used interchangeably at this time without the politicisation of the Left-Right cleavage in Korean politics.

This tendency continued during the colonial era, as seen in The Provisional Charter of Korea (대한민국임시헌장, 大韓民國臨時憲章, *Daehanminguk Imsi Heonjang*), which was declared on 11 April 1919, the word 'people' was generally used over its clauses to indicate the people bound to the jurisdiction of independent government (Kim 2009, 72).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signifier 'people' represented that situation of an amorphous time-space in which any ideology (democracy or nationalism) failed to conquer the hegemonic stance in Korean society. Thus, anything could be defined as the newborn social order after the disruption of the imperial/colonial regime (Im, C-M 2014, 194-195). In this period, whether on the Left or the Right, every political camp was competing to define the meaning of 'people' (not 'nation' or 'nationals') as the word was understood as (a) an ultimate goal of the state and politics; (b) a criterion to judge the quality of the state and state organisations; (c) a source of criticism of the competing ideologies; (d) a basis for the legitimisation of political programme for the establishment of dominant order by political groups; (e) a source of the criticism of the contemporary dominant ruling structure and orders (Im, C-M 2014, 202-211).

Since September 1945, when the nation was divided into the Left and Right,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terms of people and nationals has been differentiated (Kim 2009, 73). State-centred thinking became prevalent among the Right, while revolutionary thinking characterised the Left (Ki

m 2009, 73-74). This difference resulted from their different views on the source of legitimac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government in Korea. For the pan-Left, the state-building activism was based on the organisations named the People's Committee (인민위원회, 人民委員會, *Inminwiwonhoe*) derived from the numerous branches of the Committee for the Prep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CPKI, 건국준비위원회, 建國準備委員會, *Geongukjunbiwiwonhoe*) which voluntarily emerged nationwide. On the other hand, the pan-Right considered itself as the inheritor of the legal trad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GROK,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Daehanminguk Insi Jeongbu*) established in Shanghai, 1919 (Kim 2009, 76). Both groups prioritised state-building, but their vocabulary differed, and these differences distinguished the Left and Right. This discursive power caused the signifier 'people' (인민, 人民, *inmin*) to lose its sovereign power among Right-wing activists and people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the people from Western democracy was endowed with a more state-centred meaning in South Korea, where it translated to 'nationals' (국민, 國民, *gungmin*), which is a combination of Chinese characters 國 (국 *guk*, which means the state) and 民 (민 *min*, which means people).<sup>2)</sup>

2) This distinctive usage of the term 'people' by the Left and 'nationals' by the Right was perceived by the politicians of those days. For example, Lyuh Woon-hyung, the centre-right chairman of the CPKI was dismayed by the public perception of using 'people' as a symbol of the Left (Park, 2009, 75) and regretful when the term was appropriated for the name of the new state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인민공화국 Joseon Inmin Gonghwaguk) (Henderson, 2000[1968], 195). Since then, the CPKI was gradually taken by Left-wing activists, ultimately leading to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st state of North Korea. Gregory Henderson evaluates if the name suggested by the CPKI had b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he process of state-building was different from the depiction that we now know (Henderson, 2000[1968], 195-196). Similarly, Yu Jin-o, who drafted the constitution for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f ROK in 1948, at first adopted the word 'people' to refer to the Korean people to avoid an overly state-centred appearance, but the members of the Assembly corrected it to 'nationals' to avoid a charge of Left-wing-like implications in the Constitution (Kim, 2009, 82-84). In his memoir, Yu later deplored this correction, saying, "We lost the good word ['people'] to communists" (Yu, 1980, 65).

Political scientist Im Hyug Baeg re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大韓民國, *Daehanminguk*) established on 15 August 1948 as a ‘defective modern state’ where the coherence between demos (민, 民, *min*) and ethnos/ethnie (족, 族, *jok*) that had remained intact for thousands of years had been broken (Im, H. B., 2014, 154). Here, we see the word ‘nation’, translated to *minjok* (민족, 民族), gained populari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came to the fore in Korean politics a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Joseonminjujuewui Inmin Gonghwaguk*) was established on 9 September 1948 as North Korea. Since the boundary of the two new states was defined by the 38th Parall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wo kinds of people for each state were constructed vis-a-vis the practice of the state-system, making two ideals of the nation (or finally, two nations of two nation-states).

### III. Korean War: One nation, Two States, Two Peoples (*gungmin* / *inmin*), and Then Two Nations

Anthropologist Kwon Heonik (2020) estimates the consequential construction of national communitie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as:

“In post-colonial Korea, the process of actualisation involved two separate state institutions and powers, each of which was committed to building a single national community and to incorporating all traditional communities into that single unity. The two also regarded each other as an illegitimate political entity and identified the prospect of a meaningful national community with the elimination of the rogue state entity. The national community envisioned by each of these states was *unitary and exclusive*. In contrast, the communities that

these states sought to bring to the mo[u]ld of the envisioned political community were *plural and inclusive*, if seen in relative terms to the very sphere of absolute political cohesion and homogeneity coerced by the warring state” (italics added, Kwon 2020, 63).

Though the concept of nation was crucial to resist colonial rule, its emphasis on the oneness of racial and ethnic commonness by the term *danilminjok* (a unitary nation), was derived from the situation of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Park 2010, 108-208). It resulted in the new concept of people who began to recognis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ange of one temporal nation and two spatial peoples of the two states. This paranoia is inscribed in the first chapter of the ROK Constituti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which has never been revised through the five consecutive amendments and remained as of 2024. This clause indicates the exigent pressure for reunification, buttressing the spatial elements of nationalism in Korea. In the principle of the ‘nation=state formula’, the people considered as the political subjects must imagine a nation *prior to* the state (Balibar 1991, 93-94). It is not applicable 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sense of one nation is accepted as given to the *two peoples* (*gungmin* and *inmin*) whom the highly centralised and authoritative states have constructed during the state-building process following the Korean War.

This process subsequently created the ideal two nations (the unified ‘nation’ - *Minjok* - by the liberalist *or* communist states) imagined by two kinds of people. This duplicated discrepancy was a fundamental basis of the popular nationalism of South Korea at the very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Table 1> shows the temporal-spatial (in)congruence between the state-system and the state-idea in terms of territory, nation, and the peopl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table is derived from the Andersonian definition of a nation: a cultural system of

sharing time and space among anonymous people who have never met.

〈Table 1〉 (In)congruence between time and space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lonial rule	Liberation space	After the Korean War
Time (state-idea, nation) - history/event	congruent	congruent	congruent but with differently remembered later
Space (state-system, the state) - territory - state institution	absent or unidentifiable but congruent	congruent but in the process of discrepancy	incongruent

\*Source: Author

Ushering a new government in 1948,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Rhee Syngman, declared ‘일민주의’ (一民主義, *Ilminjueui*, One-People Principle) as the ideology of the newly-created ruling party called 대한국민당 (*Daehangungmindang*, Korean Nationalist Party, KNP) in 1949 and the basic principle for the new government, promoting its distribution as national activism (Seo 1997, 155; Kim 2004, 448). The principle itself emerged as a breakthrough of the political stalemate between Rhee without the organisational basis and his primary oppositions led by 한국민주당 (*Hangukminjudang*, Korean Democratic Party, KDP). However, it shows Rhee’s intention to supplement the low institutionality of his support with his charismatic virtue as ‘국부’ (國富, *Gukbu*), which means ‘the Father of the Country’ (Kim 2004, 445–448; Hong 2015, 95) extending his supporters and legitimacy nationwide.

“Our nation is one. The national territory is one: the spirit is one: life is one: treating each other is one: politics and culture are one everything. If there is something that cannot be one, we must make it one. *If there is something to interrupt, we must eliminate it.* Whoever

with the individual thought harming to the one, discard that thought [...] DIVIDE WE FALL UNITE WE LIVE [...]” (italics added, *Ilminjueuigaeseol* [Introduction of One-People Principle], Rhee, 1954, 7-8)

Rhee Syngman was originally sceptical of party politics as he disdained partisans or factionalism even since the colonial era when he was the president of PGROK (Im, H. B. 2014, 364). The foundation of the KNP can be understood partly as a manifestation of his changed views of party politics. However, the party was not characterised by its political stance (the Left or Right) or interest groups (Kim 2004, 449). It is considered ‘the party of people’, ‘the sole party’, and the extension of the public campaign for nationalistic movement (Kim 2004, 449). Initially, Rhee Syngman’s supporters consisted of the peasant class who benefited from the farmland reform implemented in 1949, while the opposition KDP’s members were mainly from the class of former landlords (Im, H. B. 2014, 219).

In this context, introducing the One-People Principle may be understood as a mere expansion of the support groups for the ruling elites near Rhee. Still, it impedes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class interests or other political values but the nationalistic sentiments of the masses. The principle was distributed by para-governmental organisations (not the KNP), and Ahn Ho-sang, the first Minister of Culture and Education, used his administrative power to systemise and develop the principle (Kim 2004, 450-457). The Yeosun Revolt by the Left-wing military officers and civilians in October 1948 prompted this process,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first legislated on 1 December in the same year, catalysed the disciplining governmentality of the society (Im, H. B. 2014, 388). The government-led paramilitary student organisation called 학도호국단 (學徒護軍單團, *Hacdohogukdan*) in all schools over the secondary level also served as a state-ideology apparatus to inculcat

e the principle with the slogan of ‘the unification of nationalism ideology’ (Hong 2015, 95-96). This organisation had existed in South Korea, even in the 1980s during the Fifth Republic. It must be remembered that although similar organisations were sprouting in Korean society during the Korean War in 1951, they had no legitimacy based on the law as the new incumbent, as Rhee’s personalised Liberal Party (자유당, *Jayudang*), rebuilt from KNP in 1951, was established with the view that ‘The person is better than the institution’ (Hong 2015, 97).<sup>3)</sup>

The initiation of the Korean War on 25 June 1950 accelerated this process of personalisation of politics by Leader Rhee. While the frontlin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changed several times as the war progressed, it meant civilians from both sides of the North and South faced exodus: for the residents near the border area, every change of occupant armies forced them to choose their national identity or flee (Kwon, 2020, 76). In this situation, their future security was jeopardised, like immigrants waiting for residential status in a new country (cf. Bryan 2018; Simonsen 2018), as the two states’ boundary was uncertain and unpredictable while it was moving up and down. People around the frontline kept flags of both states (태극기, *Taegeukgi*, the national flag of ROK and 인공기, *Ingonggi*, the national flag of DPRK) and flew whichever reflected the current occupation in their village (Jung 2007, 149-150). Families were divided by ideological differences, sometimes culminating in acts of violence, killings, and unanticipated farewells among family members, friends, and lovers. An elder brother may have chosen to go to the North, while his younger sister would excuse their situation when the ROK troops interrogated her about her brother’s whereabouts. The Korean War targeted those intimate relationships, as Heonik Kwon (2020) insightfully explains: the emergence of the modernised self as an individual might hide the essence of the social self inside. However, the

---

3) On the personalization of the party Jayudang by Rhee and its supportive quasi-political organizations, see Lee, K-R.(2009).

overt departure from that familial and social self co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political community (the nation-state), idealised at the surface level as the combination of individuals, but essentially functions as an extension of the family, which can be called as 'politics of kinship' (Kwon 2020, 19-20).

The exigency to be one destabilised the one-nation-two-states system, driving exclusive support for the leaders of both states and resulting in a desire to annihilate the other state (Choi 1996, 70). This governmentality of the state, governing people from above (Foucault 2007[1978]) or hiding but watching them (Foucault 1995[1975]), combined with the inscription of the anti-communist and patriot soul into the body and its intimate relationships. One of the most explicit mechanisms for creating political tension was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Kwon 2020, 90-110) applied to the family members of suspected communists, by which the morality of personal relationships was politicised, and the politics by the state moralised.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was not merely an acceptance of the ruling ideology, but its embeddedness in Korean society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living fear of invasion and its consequences of pain and poverty (Choi 1996, 80).

As the state institution of the ROK experienced the war, its size in the repressive apparatus was rapidly increasing (Im, H. B. 2014, 176-180). The development of highly centralised bureaucracies in the post-colonial state was isolated or shrunk vis-a-vis society, forming an 'over-developed state' (Choi 1985: 1996, 80-81). Choi's concept, adapted from Alavi (1972), explains how post-colonial states differ from European states. Contrary to European states, which serve the purpose of the single bourgeois class, the state apparatus of a colonial state, especially a bureaucratic-military state, is 'over-developed'. This means that the state during colonial rule coercively halts the voluntary growth of indigenous social classes, maintaining its dominance over society even after independence. Choi's explanation of post-colonial states echoed widely among scholars in t

he 1980s, especially his treatment of the special context of Korean colonial history, which was one of the most compelling issues among the student-led social movements.

While the North Korean army was established as the 'liberation army' and the DPRK as a 'democratic basis' for the proletariat revolution and liberation of South Korea, the main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Army was to 'guard' the status quo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Korean society against Left-wing activism (Han 2010, 162-165). The Soviet occupation of North Korea was accompanied by the former's support of Kim Il-Sung to seize power and eliminate his rivals, such as Cho Man-Sik and Park Hon-Young (Lee 2010).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at first, fostered competition between various associations or groups, but this is understood as the 'standardis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actual resources, organisation, capacity or the substantial support of the people in Korea (Im, H. B. 2014, 159).<sup>4)</sup> Political engagement was divided between the Left-wing nationalists with popular support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Right-wing native elites (Choi 1996, 54). This resulted in the rapid growth of the Left-wing organisations' numbers, while the Right-wing continued to form coalitions and partitions (Im, H. B. 2014, 164-165). Howev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bandoned their plan to cooperate with the Left-wings due to the decision around the issue of trusteeship in the first US-Soviet Joint Commission and its subsequent disputes among the Left-Right. It, in turn, resulted in the radicalisation of the Left, followed by illegal activism, violent struggles, and guerilla movements (Im, H. B. 2014, 166-171). This situation allowed the police and ar

---

4) When General John Reed Hodge, the military governor of South Korea, opened the discussion to the native leaders in September 1945, nearly 1,200 people gathered. Th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increased from thirty-three on 12 September 1945 to forty-three on 10 October. When Rhee Syngman came to Korea after a week, more than fifty parties and organizations existed, increasing to three hundred a year later (Henderson, 2000[1968], 212).

my to gain experience and develop a network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For example, after the autumn harvest uprising in 1946, the state control consolidated in the county-level governing organisations. This centralised top-heavy system spread into the countryside, and Rhee Syngman's Right-wing irregular youth groups, which filled up the lacuna of the state apparatus' reach, repressed the Leftist activism nationwide (Cumings 2002, 244). Following Japanese colonial rule, the police officers, who were the people's target, expanded their size from eight thousand in August 1945 to twenty-five thousand in October 1946 (Im, H. B. 2014, 179). There were 113,000 soldiers at the beginning of the War and 600,000 by 1953 (Im, H. B. 2014, 318).

During this process, an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was granted among the administration, parliamentary and judiciary (Henderson 2000[1968], 240-259). For Koreans, the government had been considered the administrative power, which was perceived as far away from the public, who only encountered the state authority via the police in town or local communities' personnel in their daily lives (Henderson 2000[1968], 247). Interestingly, elections were regularly held, even during wartime (Im, H. B. 2014, 375-376). Two years after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ion in 1948, the general election was held. In 1952, the presidential and the first local elections were held after the wartime capital was moved to Busan for strategic reasons. However, these elections were flawed by Rhee Syngman's ambition for a long-term presidency.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in 1952 was a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ttempt to revise only the clauses related to the election, combined with sabotaging or arresting the oppositional assembly members and mobilisation of quasi-governmental organisations to secure the number of votes in the Assembly. The president's direct election was first introduced in the Constitution of ROK, aiming to encourage personal leadership and the support of people who are explicitly considered outside the institution. This event was the first in

Korean society in which people perceived politics as focusing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rather than parliamentary discussions. It also marked the first of the eight consecutiv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n modern Korean history until 1987, seven of which dealt with the issue of how to elect the president (Bae 2001, 251). However, the election experience in the early part of the beginning of the new state functioned as a regular event in which Korean people realised themselves as the sovereign people of liberal democracy and distinguished themselves from people in North Korea under socialist rule (Im, H. B. 2014, 319).

#### **IV. Time of People: the April Revolution and the Emergence of Vertical Antagonism**

The Korean War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exigency for unification, which was concerned with the concept of oneness and the centralisation of the state institution in Korean politics. Through the civil resistance on 19 April 1960, peopl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ROK, succeeded in making their temporality in the nominally democratic state contrary to the state's time, which drove itself into the perpetuation of one leader. Rhee Syngman's administration contributed to the start of the modern democratic nation-state by institutionalising the election or successful land reform that liberated the peasants—70 per cent of the population (Im, H. B. 2014, 231) from the traditional dominant rule of the landlords. However, the administration wasted its prestige by interrupting the temporality of liberal democracy, distorting it with president-driven statesmanship, which undermined the popular support needed to curb Rhee's rival elites. It can be understood as the Korean version of Bonapartism (Marx 1978[1851-52]; Im, H. B. 2014, 233-237, 352-359). That means one populist leader comes to

power above the highly administrative state with the support of anonymous people without the vested interest ('potatoes in a sack') of the existing Left and Right elites who failed to secure hegemony in society. In the circumstance of post-war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and its status as 'the bulwark of the liberal bloc', South Korea's nationalism was politicised with anti-communism, and its liberal democracy was nationalised with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via the centralised state apparatus.

The cleavage between the Left and Right lost its significance in Korean society because the former was totally expelled from the political discourse; thus, symbols of or identification with the Left (좌파, 左派, *jwapa*) had no public currency, the elites opposing Rhee were fairly ideologically aligned with him. In this circumstance, Rhee's ruling bloc could abu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mentioned above in 1952 (introducing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and 1954 (allowing exceptional consecutive terms to the first president). The election for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n 15 March 1960 was held based on this third amended constitution, which was seriously flawed in allowing for a series of vote-buying, fabrications, and supervised vote casting to advantage Rhee and his running mate, Yi Ki-pung. These attempts to rig the election were rumoured among the public before March (Henderson 2000[1968], 266).

The second-level education students first reacted to the illegality of the Rhee government through group activism (Oh 2020). The significance of the students in society and their size in number was increasing: the number of high-level educational institutes, such as the university, had doubled from 31 in 1948 to 62 in 1960, supporting an increase in students from 24,000 to 97,000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secondary schools grew from 97 in 1945 to 166 in 1952 and 357 in 1960 as students quadrupled between 1945 and 1962 (Henderson 2000[1968], 261). Between 1948 and 1960, 10.5 per cent of the government's annual

budget was spent on education (Oh 2020, 23). However, at first, the public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was cynical: they were considered 'opportunistic, decadent, or impure' people who failed to satisfy the social expectation for them to partake in a leading role in the social problems, it was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who led the protest to the government (Kwon 2010, 99; Kwon and Cheon 2012, 37). As only 30 and 10 per cent of males and females, respectively, attended secondary high school, the secondary students were also considered 'the elite' in Korean society alongside the university students, who accounted for only 10 per cents of the students-aged population (Oh 2020, 24, 28).

In sum, these students initiated the nationwide protest against the in-effect quasi-competitive authoritarianism (Im, H. B. 2014, 381-391) of Rhee's regime for the alleged security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on the surface. The social disorder was also prevalent due to the increasing unemployment of about 230,000 of 9,130,000 employable people in 1958 (Ha 2020, 83). In this context, the city's rapid concentration accompanied the rise of the urban poor, potentially unsatisfactory actors against the Rhee government (Henderson 2000[1968], 260-261; Ha 2020).

In fact, a seri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by Rhee Syngman and his power bloc represents the legitimacy crisis of the Rhee government. In a normative sense, the institu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political competition cannot be entirely denied by the government because those elements were the only source of legitimacy for the ruling bloc to maintain its supremacy in the circumstance of post-Korean War ideological competition, which Rhee himself deteriorated by his attempt to extend his presidential power (Choi 1996, 89). Since the protest rally by the high school students of Daegu on 28 February 1960, about 130 protests b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d taken place by 30 April (Oh 2020, 35-38). For example, the protest on Sunday, 28 February 1960, was due to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f school attendance mandates that were explicitly enacted to prohibit students from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campaign of the most considerable opposition,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 *Minjudang*) (Pyeonjipsil 1984, 16). The temporality of uprisings consisted of four periods (Pyeonjipsil 1984, 11-41, 16; Oh 2020, 38-52).

1. From 28 February to 14 March: the high school students emphasised their 'purity' against the corrupted and mute old generations without raising electoral issues.

2. From 15 March to 11 April: the unfair election on 15 March provoked uprisings in Masan, with civil casualties from police gunfire and the body of a high school student shot by a tear-gas bullet found by the sea of Masan on 11 April.

3. From 11 April to 19 April: the death of a youth sparked the second protest in Masan, which spread to the neighbouring cities and provinces, and the students of universities in Seoul joined the flows of uprisings between 16 and 18 April, which resulted in the 'Bloody Tuesday' on 19 April, with six thousand casualties by police.

4. From 20 April to 26 April: the government declared emergency martial law in Seoul, Busan, Gwangju, and Daejeon from 19 to 20 April, and 258 professors of universities joined the rallies on 25 April, demanding Rhee step down. The martial law army was reluctant to stop the protests, resulting in Rhee's proclamation of his resignation on 26 April.

It was the first time in modern Korean history that the people's direct actions succeeded in realising their political need to oust the corrupted leader outside the institutionalised setting of political machines, such as a party or other representative system. It was also the first instance under the rule of a republican state that the concept of the vertical contention between 'bottom' and 'up'<sup>5)</sup> was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a

---

5) In this regard, Hwang (2020, 271) indicated and criticized that the estimation of the

political event.

However, the needs of the people varied among the protestors: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five newspapers which covered the student protesters: demands, they consisted of academic freedom (23 per cent), denial of the unfair election (17 per cent), denouncement of corruption and dictatorship (15 per cent), and even the objection of the enforced subscription to the newspaper (0.7 per cent) while support for the opposition party accounted for only 1 per cent (Kim, S-T. 1983, 197): these demands were incorporated under the term 'freedom' or 'civil right'. According to Hong (2020, 197-198), one scholar at Seoul University published an article in his university newspaper at that time, characterising the uprisings as the institutionalisation of democracy once considered an 'imported good' from the US. The intellectuals of the age commonly agreed with the perception that democracy is imported from Western countries without a stable establishment in the Korean context (Hwang 2020, 254). However, the April Revolution showed that people's perception of the political reality was at odds with the learned content and ideal of democracy found in textbooks (Hwang 2020, 240), which was the very reason that they engaged in social movements outside the institutional norms of democracy.

Low institutionalisation is due to the 'premature' democratic institution adopted at the beginning of a state-building process (Choi 1996, 20-23; Im, H. B. 2014, 378). Contrary to the experience of advanced democratic countries, the general election rights were, in default, given to the people in Korea without the political struggle to broaden the election rights. In this circumstance, labours, peasants and any other social interest groups had few chances or need to organise their interests in the form of the political party, while political elites had no need to

---

revolution of intellectuals of the age was biased to be elitist because they reduced the role of the people in general by focusing on the participation of the students and intellectuals, which can be understood as horizontal or the 'revolution from beside'.

engage in political exchange with them (Im, H. B. 2014, 378). Though the event of the election is regularised in people's everyday lives, even in the midst of the Korean War, democracy was understood, focusing on the action of the election itself and gathering votes relying on the fame of political notables and the personal connection between candidate and electorate. This political culture was later maintained in modern Korean politics, even during the general election on 29 July 1960, the first election held under the new constitution based on the parliamentary system (Lee 2000, 87). Because the pledges of political parties, whether conservative or progressive, were ideologically similar due to the political expediency of anti-communistic sentiments, the critical factor for the election was who would achieve those pledges. The focus on personal relations, localism, familial connection, and rewards for the vote was still prevalent after the revolution on 19 April 1960.

Meanwhile, the convergence of political agendas between the Left and Right following the rise of neoliberalism in the 1980s was the context for emerging populism or post-democracy in Western democracy (Mouffe 2018, 16,-17, 36, 84-85). In this aspect, modern politics in Korean history already had latent elements that could be characterised as populist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state-building process. Whether Korean politics can be characterised as populist will be further scrutinised in the rest of this chapter. Considering this issue, the coup d'état on 16 May 1961, which broke out at the level of relatively 'up' but which cannot be characterised as entirely 'up' in the vertical antagonism between the elite and the people, became the critical point that affected the development of several populist elements in modern Korean politics and society.

## V.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se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nation and the state as a key source for political dynamism. In the context of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beginning of neoliberal marketisation of politics, Mouffe (1993, 1-8) once warned of the absence of the political, which could occur in disguise by the convergence between the Left and Right in the name of consensus. Her point was that such convergence wears out the plural forms of antagonism, reviving the non-negotiable issues of moral value and essentialist identities, such as religious, nationalistic, and ethnic identity. Her first remedy in 1993 was a radicalisation of liberal democracy, which was withdrawn in the context of the mobility of horizontal antagonism between the Left and Right to the vertical between the elite and the people in her project of 'Left Populism' (Mouffe 2018). Suppose that change in the Western democracies concerning emerging populism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had already existed in South Korea under the post-colonial cum Cold War ideological competition, accompanied by the Hot War inside one nation: people in Korea could not experience the horizontal competition between 'adversaries' (like the Left and Right) at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s. The state's official stance was the essentialised, moralised antagonism against the 'enemy': the communist Left. In this vein, the voluntary associations against the state, which should have been institutionalised in terms of 'organising the distrust' (Rosanvallon, 2008, 4), were made vertically: the establishment versus the people at the beginning of the nation-state building process at South Korea. This was also unintentionally caused by personalistic leadership outside the low institutionalisation of electoral politics during the Rhee government.

However, we cannot be sure of the direct access between Rhee and the people, though his strategy is close to detouring around the institution, without the evidence of general support nationwide for his approach.

Thus, the April Revolution, the time of people, was the result of these complex elements. However, without the matured horizontalisation of confrontations of plural democratic demands, this verticality is distinguished from the morph of popular demand into populism, as Laclau (2005) theorises.

For now, we cannot jump to the conclusion that Korean politics has been populist from scratch since its nation-building, as its necessary condi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not yet firmly institutionalised. A recent study on populism once indicated that the condition to argue the case of populism should be conditioned to the liberal representative democracy (Urbinati 2019), warning of the overflowing boom of populism research. However, this study aimed to argue the construction of conditions in Korean politics as elements partly serving the populist tendency, not to name a specific regime as populist firmly. Thus, the degree of or discursive construc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alisation in Korean politics would be a key to deciding populism in Korean politics, which can be a subject of further studies.

## References

- Choi, J-J. (1996). *Hangukminjujueui-eui Jogeon-gwa Jeonmang* [The Conditions and the Prospec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Seoul: Nanam.
- Cumings, Bruce (2002).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I*. Seoul: Yoksabipyungsa.
- Foucault, M. (1995[197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lated by A. Sheridan. New York: Vintage Books.
- Gellner, E. (2006). *Nation and Nationalism*, 2nd edi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enderson, G. (2000 [1968]). *Soyongdori-eui Hangukjeongchi* [Korea: The Politics of Vortex]. Translated by H-U. Park and J-S. Lee Seoul: Hanul.
- Hobsbawm, E.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 H. B. (2014). *Bidongshiseong-eui Dongshiseong: Hanguk Geundaejeongchi-eui Dajungjeok Shigan* [Simultaneity of Non-Simultaneous: Multiple Temporalities of Modern Politics in Korea].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Kwon, H. (2020). *After the Korean War: An Intimate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clau, E. (2005). *On Populist Reason*. New York: Verso.
- Lenin, V. I. (2020[1917]). *The State and Revolution*. Foreign Language Press.
- Mouffe, C. (2018). *For A Left Populism*. London: Verso.
- Oh, J-Y. (2020). Sawolhyukmyeong-gwa haksaeung [The April Revolution and students]. In: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 *4-wol-hyukmyeong-eui Juche-deul* [The Subjects of April Revolution]. Seoul:Yeoksabipyongsa.
- Park, C-S. (2010). *Minjok, Minjokjueui* [Nation and Nationalism] Seoul: Sowha.
- Pyeonjipsil (1984). *Sawol hyeokmyeong jaryojip: 4.19 eui minjungsa* [Sourcebook of the April Revolution: The history of Minjung of the April Revolution]. Seoul: Hakminsas.
- Rhee, S. (1954). *Ilminjueuigaeseol* [Introduction to One-People Principle]. Seoul: Ilminjueuiboguphoe.
- Stalin, J. (1913).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NobodyOwnsLand.
- Urbinati, N. (2019). *Me the People: How Populism Transforms Democrac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Yu, J. O. (1980). *Hunbeopgicho Hoegorok* [Memoirs on Founding the Constitution]. Seoul: Iljogak.

- Abrams, P. (1988[1977]). Note on the difficulty of studying the state.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1).
- Alavi, H. (1972).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Pakistan and Bangladesh. *New Left Review* 74.
- Balibar, E. (1991). The Nation form: history and ideology. In: E. Balibar and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Verso.
- Brubaker, R. (2017). Why Populism? *Theory and Society* 46.
- Bryan, C. (2018). "Wait, and While You Wait, Work": On the reproduction of precarious labor in liminal spaces." In: P. G. Barber and W. Lem (eds.) *Entangled Mobilities across Global Spaces*. Cham: Palgrave Macmillan.
- De Cleen, B. and Stavrakakis, Y. (2017). Distinctions and articulations: a discours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populism and nationalism. *Javnost - The Public* 24(4).
- Freedman, Michael (1998) Is nationalism a distinct ideology? *Political Studies* 46.
- Foucault, M. (2007[1978]). 1 February 1978. In: A. I. Davidson (ed.)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Translated by G. Burchel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n, Y-W. (2010). Nambukhan gundae changseolgwajeong bigyo: 1945-1948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undation of the armies in South and North Korea: 1945-1948]. In: C. S. Lee (ed.) *Nambukhan Jeongbusurip Gwajeong Bigyo: 1945-1948* [Comparative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1945-1948]. Goyang: Ingansarang.
- Hong, T. (2015). 'Gwaing-doen minjok' gwa 'chajeu su eopneun gaein': Ilminju eui-wa Hanguk minjokjueui-eui teuksuseong ['Excessive Nation' and 'Indiscoverable Individual': 'One-People Principle' and particularity of Korean nationalism]. *Hangukjeongchiyeongu* [Journal of Korean Politics] 24(3).
- Im, C-M. (2014). Haebang gonggan-eui inmin, grigo minjokjueui-wa minjujeui [Inmin(People) and the two momenta of democracy and nationalism in post-liberation South Korea]. *Hankuksa-yeongu*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167.
- Kang, H-J. (2008). Saeroun gukga-eui juche-wa gongdongchae jihayng-eui eonon: Haebanggi si-e natanan sieoroseo 'minjok'-eui yusagaenyeom-eul jungsimuro [The subject of the new state and community-oriented language: focusing on the concept similar to "nation" as a poetic world in poems of Liberation period]. *Urieomunyeongu*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1.
- Kang, J-I. (2012). Bakjeonghee daetongryeong-eui minjokjueui damnon: minjo

- k-gwa gukga-eui ganggohan gyeolhabae gicohan bangong, geundaehwa minjokjueui damnon [An analysis of President Park Chung-hee's discourses on nationalism: anti-communist modernising nationalism based on the iron combination of nation and state]. *Sahoe Gwahak Yeongu* [Social Science Studies] 20(2).
- Kim, H. (2023a). A cul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sm and populism: the case of South Korea. A double degree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Kim, H. (2023b). A cul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sm and populism: the case of South Korea. A double degree PhD thesis. Yonsei University.
- Kim, S-B. (2009). Nambukgukga suripgi inmin-gwa gungmin gaenyeom-eui buinhwa [Differentiation of the concepts of people and nation during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nguksayeongu*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144.
- Kim, S. J. (2004). Iseungman-eui Ilminjueui-eui jechang-gwa nonri [On advocacy and logic of Rhee's One People Principle]. *Hanguksasangsahak* [The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 22.
- Kim, S-T. (1983). "4.19 haksaeongbonggi-eui dongin [The moving factor of the April student uprising]." In: Wan-sang Han, Woo-jae Lee, and Jae-taek Shim et al., *4.19 Hyeokmyeongron 1* [The April Revolution Theory 1]. Seoul: Ilwolseogak.
- Kwon, B. (2007). Geundae chogi 'minjok' ganyeom-eui byeonhwa: 1905-1910 nyeon Daehanmailshinbo-reul jungsim-euro [The concept of 'Nation' in 1905-1910: focused on Korea Daily News]. *Minjokmunhaksayeongu* [Journal of Korean Literary History] 33.
- Lee, C. S. (2010). Soryeon-eui Bukan Jeongchiseryeok-e daehan jeonchaek: 1945-1948 [Soviet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n politics: 1945-1948]. *21 Segijeongchihakhoebo*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 Lee, H-Y. (2000). 1960 nyeon 7.29 chongsungeo-eui jeongaegwajeong-gwa seonggyeok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29-July general election in 1960]. In: *Hanguk Yeoksa Yeonguhoe Sawolminjunghangaengyoengubann, Sa-il-gu-wa Nambukgwangye* [The April Revolution and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Seoul: Minyeon.
- Marx, K. (1978[1851-52]).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In: R. C. Turker (ed.) *The Marx-Engels Reader*.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Park, M-R. (1996). Bundan sidae Hanguk minjokjueui-eui yihae [Understanding of Korean nationalism in the division era]. *Segye-eui Munhak* [World Literature] 21(2).

- Seo, J-S. (1997). Yiseungmanjeongbu chogi-eui Ilminjueui [One People Principle of the early Rhee Syngman administration]. *Jindanhakbo* [The Chintan Hakpo] 83.
- Simonsen, A. (2018). Migrating for a better future: 'lost time' and its social consequences among young Somali migrants. In: P. G. Barber and W. L. em (eds.) *Entangled Mobilities across Global Spaces*. Cham: Palgrave Macmillan.
- Yark, B. (2001). Popular sovereignty and nationalism. *Political Theory* 29(4).

# 민족과 국가 사이:

## 식민지 유산 및 반공주의에 의한 남한에서의 포퓰리즘적 수직적 적대 형성

김현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 초록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공간 상상의 차이가 남한에서의 정치적 적대를 수직적으로 형성했음을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선 '인민'과 '국민' 및 '민족'과 같은 경쟁적인 개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식(implantation)되었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미군정 하 해방공간에서 정치적 결사들의 형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한의 선거민주주의 하에서의 수평적 정치균열의 부재가 식민지 지배의 유산 및 강한 반공주의에 기인하며, 이러한 주장이 현재의 한국 정치사에도 유의미하다고 결론짓는다.

주제어 : 민족주의, 국가론, 포퓰리즘, 반공주의, 한국정치



# JNKS 편집 및 심사규정

## JNKS Editorial Standards and Peer Review Process

3차 개정일 2022. 12. 01.

2차 개정일 2020. 09. 01.

1차 개정일 2016. 12. 02.

제정일 2015. 03. 01.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약칭 JNKS, 이하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 간사로 구성된다.

#### 제3조 (편집위원장의 자격 및 선임)

1. 위원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을 고려해 발행인이 선임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1.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편집 간사의 자격 및 선임)

위원회의 원활한 연락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예심을 진행하여 초심 여부를 결정
  - 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다.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라. 논문 심사 및 학술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제3장 학술지의 발간

### 제7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학술지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학술지 투고전용 시스템(jnks.jams.or.kr)을 통해 투고한다.
2.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북한학과 관련된 논문 또는 북한학의 인접 분야의 논문이어야 한다.
3.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본 학술지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4. 학술지에 문헌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가. 문헌연구는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 분야의 각 연구영역에 있어서 이론적, 방법론적 전환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2편 이상의 주요 문헌(논문 혹은 저서)들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평론을 의미한다.
  - 나. 문헌연구는 연구논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 다. 원고의 분량, 심사규정 및 절차 등 기타 사항은 일반 논문과 동일하다.
5. 학술지에 반론을 게재할 수 있다.

- 가. 반론은 학술지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박을 의미한다.
- 나. 반론의 원고 분량은 원고지 50매 이내로 정한다.
- 다. 반론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6. 제출 원고는 학술지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 가. 원고는 국문 및 영문초록,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나.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단, 각종의 표와 그림 및 일람, 색인, 부록, 영인 자료 등은 분량 계산에서 제외한다.
  - 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 1 → 1) → (1) → ① 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라. 기타 원고 작성 요령은 APA 양식(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style)이 정한 문헌 작성 양식을 따른다.
- 7. 게재 신청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임의 탈락시킬 수 있다.
- 8. 논문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마감일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ppri.korea.ac.kr)를 통해 별도 공지된다.

**제8조 (논문 게재신청자격)**

- 1.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 분야의 전공자 혹은 실무자에 한해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 2.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 분야의 대학원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나 위원회에 의해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임기 중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편집위원과 편집 간사는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 1. 논문 게재자는 게재료(일반논문 10만원 / 연구비지원논문 3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 2. 제출된 논문이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0조 (발간 예정일)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 제11조(예심)

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원고가 접수되면 KCI 유사도 검사 및 학술지와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초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탈락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 저자에게 관련 내용을 별도 통보하도록 한다.

### 제12조(초심)

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1. 심사위원 위촉 -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순차적으로 심사위원이 위촉되어 심사가 진행되었을 때 2인의 심사자가 심사결과를 모두 '가'로 판정하면 나머지 1인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2. 심사의뢰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 초심 결과는 10일 이내에 회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可)', '수정(修訂)', '부(不)'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 심사 판정표>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심사결과
가	가	가	계재 가능
가	가	수정	
가	가	부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심사결과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부	
가	부	부	게재 불가
수정	부	부	
부	부	부	

**제13조 (수정 후 게재)**

1.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2.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심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정 논문의 수정 정도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한다.
2. 다시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에서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수정 논문의 수준이 학술지 게재에 적당한지 심사한다.
3. ‘수정 후 재심’ 결과는 편집위원회 결과 반수 이상 찬성하는 경우만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제15조 (수정 불이행)**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게재신청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반론 제시 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논문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제16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17조 (이의제기)**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논문게재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응대한다.

## **제5장 기타 규정**

### **제18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할 수 있다.

### **제19조 (게재증명과 표절 처리)**

논문게재증명은 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소 저술 윤리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20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술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JNKS 저술 윤리강령

### JNKS Ethical Standards for Scholarly Publication

2차 개정일 2020. 09. 01.

1차 개정일 2016. 12. 02.

제정일 2015. 03. 01.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분야의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전문학술지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약칭 JNKS, 이하 학술지)의 발간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이다.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는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 분야 연구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혹은 게재 신청하는 사람은 물론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들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 제1조 (표절의 기준)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3.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2조 (중복게재의 기준)

1.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2.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제3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지명하는 3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한다.

##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4조 (표절에 대한 제재)

1.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3.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공공정책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제5조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1.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3.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공공정책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 제6조 (기타)

본 학술지의 수록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반드시 원출처를 밝혀야 한다.

# JNKS 원고 작성 요강

## Publication Manual of JNK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의 원고는 기본적으로 APA 양식(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style)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을 따른다.

*The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i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PA styl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here not otherwise specified, it follows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

3차 개정일 2022. 12. 01.

2차 개정일 2020. 09. 01.

1차 개정일 2016. 12. 02.

제정일 2015. 03. 01.

## 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는 표지, 국문 및 영문초록(영문 저자 및 소속기관 포함), 본문, 참고문헌의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원고는 한글,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논문 작성 언어 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 이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지 하단에는 각주를 두어 교신저자의 이름, 소속을 표기하고,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 사사표기 등을 할 수 있다. 사사표기시 논문 제목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3. 논문의 제목은 한글의 경우 15자를 넘지 않도록 하고, 영문 및 기타 외국어의 경우 2줄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초록은 새 페이지에서 시작하며, 첫 줄 가운데에 Abstract라고 표기한다. 영문

초록은 150~200 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는 'Keywords:'라고 표기한 후 영문 핵심 단어 3~5개를 나열한다. 단, 영어 외의 기타 외국어 논문일 경우 영문 초록을 1,500 단어 안팎으로 자세히 작성한다.

5. 전체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단, 각종의 표와 그림 및 일람, 색인, 부록, 영인 자료 등은 분량 계산에서 제외한다.
6.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본문 내 장, 절, 항 등 소제목은 최대 4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3단계 이내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 1) 본문 제목들의 번호는 상위제목부터 하위제목까지 I → 1. → 1) → (1) → ① 순으로 사용한다.
  - 2)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 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본문의 어느 곳에도 저자의 이름은 물론 저자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8.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9.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는 경우는 저자명(국문은 전체 저자명, 영문은 성)을 쓰고 괄호한 후 그 속에 출판연도와 쪽 번호만 표시한다.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이 되풀이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단,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10.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11. 두 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연도만 나열한다. 다만, 3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는 처음 인용 시에는 모두 제시하고 그 이후에는 첫째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한글 저자명은 “외” 영문 저자명은 “et al.”이라는 쓴다. 2명 이상의 국문저자명은 “, ”를 사용하여 나열하고 영문저자명은 마지막 이름 앞에 “&”를 붙인다.
12.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다만,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는 연도만 나열한다.
13. 표(줄간격 130%)와 그림은 < > 속에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을 붙인다. 표 제목(예: <표 1>)과 그림 제목(예: <그림 1>)은 해당 표 또는 그림의 위에 위치시켜야 하며, 그 출처는 반드시 표나 그림 아래 밝히고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는 반드시 < > 를 붙인다.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일반주(주: ), 개별주( a), b), c) ), 확률주 (\*p<0.01, \*\*p<0.001), 출처순으로 배열한다.
14.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 제시하고,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에 기재한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동양어 문헌(일본어, 중국어 등),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예: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한글·한자·일본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에 따라 배열하되, 원어 표기를 알 때에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둘째 줄부터는 3칸 들여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 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5.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한글문헌

- (1) 단행본 :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지: 출판사.
- (2)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 저자 (출판연도). 제목. <학회지명>, 권수, 쪽수.
- (3) 학위논문 : 저자 (제출연도). 제목. 학위 수여 대학 ○○학위논문 (미간행).

2) 영어문헌

- (1) 단행본 : 저자 (출판연도). 제목(이탤릭). 출판지: 출판사.
- (2) 저널에 게재된 논문 : 저자 (출판연도). 제목. 저널명(이탤릭), 권수, 쪽수.
- (3) 학위논문 : 저자 (제출연도). 제목(이탤릭). 학위 수여 대학 ○○학위논문.
- (4) 번역서나 번역논문은 한글 번역본에 한해 원서명을 함께 밝혀준다.

\* 학술지의 권, 호수를 알 수 없을 때는 저자/연도 다음에 월이나 계절을 표기.

- 3) 신문-잡지-기사는 저자명 (날짜). 기사명,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사명 (날짜).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
- 4)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 기관(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명만 쓰지 말고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두고, 출판일은 사이트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접속일 필수 기재.
- 5) 시청각 자료(영화, TV프로그램, 음반, CD-ROM 등)는 예시를 따름.

Harrison, J. (Producer), & Schmiechen, R. (Director). (1992). *Changing our minds: The story of Evelyn Hooker* [Film]. (New York: Changing Our Minds). (영화일 때).

Crystal, L. (Executive Producer). (1993, October 11). *The MacNeil/Leher news hour*. New York and Washington, DC: Public Broadcasting Service. (텔레비전 프로그램일 때).